

[경제]

■ 참 황당한 정부 유류세 정책

2004 “배럴당 35달러면 세금 30% 인하”
2007 65달러 넘는데도 “세수 포기 못해”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내려달라는 여론에 아랑곳없이 석유제품 할당관세와 석유유통시장 개선책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이런 대응은 불과 3~4년전 국제 원유가격이 30달러대를 넘어가던 탄력세율(상황에 따라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세금을 내리겠다는 방침과 대조적인 것이어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3년전 “35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19일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년 1월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해 마련했던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수정·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전까지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하던 유가 대응계획을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와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로 나눠 작성한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르면 공급위기 징후없이 유가가 오르면 강제적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 부과, 관세, 내국세 인하 등으로 대응하고 수급차질이 우려되면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 조정명령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를 2003년 1월 마련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연계해 보면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32달러에 달하

면 부과인하, 32~35달러 때는 관세 인하, 35달러 이상이면 교통세 등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인하 등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런 대책을 논의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국제 원자재가의 폭등으로 국제유가는 당시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배럴당 월 평균가격이 69.16달러에 달했던 두바이유는 이후 꾸준히 내려 올해 1월 51.75달러까지 내렸지만 이후 계속 올라 6월 들어 15일까지 평균 65.2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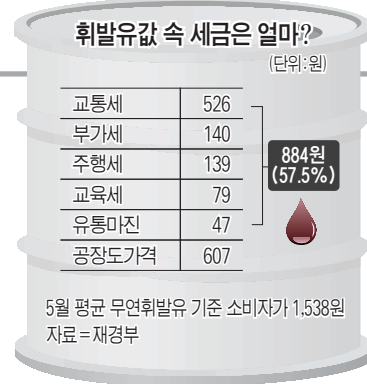
◇아무리 3년전과 다르지만=3년전에 비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중동의 정정 불안 외에 신흥 경제권의 유류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수요절감’, ‘유통시장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만을 내세우고 있다.

유통시장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장기적 사업인데다 지금까지 별다른 정책이 시행되지도 못했고 시행된 것도 별 효과가 없었다.

주유소가 북수 정유사 제품을 취급토록해 시장의 경쟁도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허용된 북수 풀사인제도는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미온적 태도로 널리 시행되지 않아 가격인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유시장 투명화와 정유사들의 시장 지배력 약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석유선물시장 개설은 ‘시



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 자체가 불분명하다.

역시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류업계의 주류구매카드제를 본떠 주유소의 유통구매시도도 했던 유통구매 전용카드도 저조한 참여, 카드사와의 수수료 마찰로 지난 2005년 시행 1년만에 중단됐다.

◇전문가 진단=유가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과제인 유통시장 개선안으로는 역부족이며 세금인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결국 유류 소비 증가가 우려를 이유로 드는 것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 당국자의 핑계에 불과하며 세금 인하와 병행한 유통시장 개선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토지보상 지연될 듯
‘대토보상제’ 6월국회 통과 어려워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개발된 땅’으로 주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국회 일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낸 개정안의 핵심은 대토(代土)보상제 도입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개발된 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토지보상에 따른 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중이며 시행시기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 건교위가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로 잡혀 있어 건교위를 통과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짜가 29일이어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전에는 소관 상임위원을 통과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울산, 대구 등 혁신도시에서 대토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연합뉴스

토지보상금 변칙상속·증여 조사

국세청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변칙상속,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40조원에 달해 세금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 각종 개발계획,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투기 우려지역과 투기 혐의자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무자격 중개업자에 의한 투기조장 행위를 색출, 차단하고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39조4천억원 중 지난 3월까지 40조1천억원을 거둬다 보고했다. 3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의 진도율은 28.8%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실질신고 유도,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서서 무리없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재정부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보유율을 2014년까지 90% 이상으로 올리고 올리는 미등록자 축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비용 환상, 가장 및 중년에 의한 신고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학자금 무이자 대출

주담금융공사는 오는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70%에 대해 무이자 또는 금리 우대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공사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신청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연 17만명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하고, 나머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연 18만명에게는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이공계 학생에게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약 3만2천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2% 금리로 대출하고 나머지 금리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연간 50여만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연간 35만명이 2학기부터 학자금 우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기획단 발족

빈곤 예방 기능이 미흡하고 수급자의 빈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기초소득보장 및 교육지원, 기초주거보장, 기초의료보장, 자활서비스 등 4개 분과,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이상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서울대 김삼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기획단은 분과별 논의, 전체회의,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은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연합뉴스

美 내수용 쇠고기또 한국 수출
정부, 전량 반송·선적 중단 조치

지난달 25일과 26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미국 육류수출업체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 이의 추가로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잘못 수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19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 리처드 레이몬드 차관은 지난 14일과 18일 서한을 통해 우리측에 카길과 타이슨의 지난달 수출 오류 경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6월 2일 견본용으로 수출한 타이슨사의 쇠고기 4상차(130kg)도 내수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차관은 “지난달 66.4t과 이번 4상차 모두 수출업체가 카길 및 타이슨 등 수출업체에서 내수용 쇠고기를 구입해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검사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해당 수출업체의 한국수출을 중단시켰고, 관련검사의 검역증명서 발급권한을 중지시켰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 수출업체가 승인된 36개 작업장에 딸린 보관장에서만 한국수출을 허용하고, 이외 보관장의 경우 자체 보관조치가 끝날 때까지 한국수출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검역당국은 추가로 확인된 수입건을 전량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잠정 중단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오세오
19일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이를 일점으로 개막된 ‘200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행사를 찾은 관람객들이 배틀 로봇 축구 게임기를 시연해 보고 있다.

19일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이를 일점으로 개막된 ‘200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행사를 찾은 관람객들이 배틀 로봇 축구 게임기를 시연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車 보험료
최고 61% 차이

메리츠·한화 ‘고가’... 흥국상용·대한화재 ‘저렴’

동일한 가입 조건을 놓고 각 온라인 자동차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비싼 곳과 싼 곳의 보험료 차이가 최고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96가지 보험 가입 조건에 따른 보험료 비교 분석에서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흥국상용화재보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16일부터 5월30일까지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회사의 가격, 서비스(인근출동서비스 보험료), 안정성(지급여력비율) 등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우선 연령(26세, 38세, 43세, 51세)과 차량 종류(소형A, 소형B, 중형, 대형자동차) 등을 기초로 96가지 조건별 보험료 차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격비율 차이가 가장 많이 난 경우는 ‘26세, 소형A 800cc, 가입경력 3년 이상, 차량가액 400만원, 중고차요율 3년전, 부부형’ 조건이었는데, 최고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50만900원)가 최저인 흥국상용화재(31만260원)에 비해 61.4% 비쌌다.

금액으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경우는 ‘26세, 소형A 800cc, 최초 가입, 차량가액 900만원, 중고차요율 신차, 가족형’ 조건으로, 최고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101만5천910원)와 최저인 흥국상용화재(73만5천50원)간 보험료 차이가 28만860원이었다.

96가지 조건에 따른 각각의 보험료 비교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상위 3개사에 들어간 빈도 수를 보면 메리츠화재(63회), 한화손보(65회), 동부화재(51회), 다음다이렉트(33회)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격이 가장 낮은 상위 3개사에 포함된 빈도는 흥국상용화재(57회), 교원나라자보(57회), 현대하이카다이렉트(44회), 대한화재(35회)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빛 보증 책임부담 크게 줄인다

보증인 보호...변제액 상한선 특정 의무화
개인간 돈거래 이자율 年 30% 이내 제한

앞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이 최종 변제할 최고액을 특정하는 것이 의무화돼 보증인의 책임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전망이다. 또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이 연 3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안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의 능력만 믿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인의 친척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해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자립 종자돈 지원

내달부터, 자활 능력 근거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비차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자활의지와 능력에 따라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후속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차상위계층의 장애급여 및 자활

대출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권 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해 신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